

## 인도 신정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최윤정 아시아태평양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yjchoi@kiep.go.kr, Tel: 3460-1039)

송영철 아시아태평양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ycsong@kiep.go.kr, Tel: 3460-1067)

## 차 례 ●●●

1. 예산안 주요 내용
2. 평가 및 전망
3. 시사점

## 주요 내용 ●●●

- ▶ 2014년 7월 10일 인도 신정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하면서도 향후 3~4년 내 7~8%대의 고성장 궤도 재진입을 목표로 하는 첫 번째 예산안을 발표하였음.
  - 이번 예산안은 모디 정부의 경제정책 로드맵이 반영된 첫 예산안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 신정부 예산안의 골자는 재정건전성을 달성하여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5월 총선을 승리로 이끈 모디노믹스의 핵심 전략인 인프라 개발 확대, 기업환경 개선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임.
  - 먼저 예산안은 간접세 중심의 세수 확대, 공기업 민영화 및 정부자산 매각을 통한 세수 외 소득 확대 등으로 수입을 늘리는 한편 작은정부를 지향하여 지출은 전년대비 절반 이상 감축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도모(재정적자 규모를 2016년까지 GDP 대비 4.1% → 3.6% → 3.0%로 축소)
  - 산업회랑과 고속도로, 산업단지, 스마트시티, 전력 등 주요 인프라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인프라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시스템을 마련
  - 외국인투자자에게 방위산업, 보험업, 전자상거래 및 도시개발 부문을 추가로 개방하고, 경제특구(SEZ) 개발 가속화, 복잡하고 불투명한 조세제도 개혁, 금융시장 선진화를 포함한 투자환경 개선방안도 제시
- ▶ 향후 인도경제가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투자 확대로 성장세를 회복할 전망임에 따라 우리나라는 인도 인프라 부문에 대한 포괄적 진출전략을 구상하는 한편 투자환경이 개선된 분야를 중심으로 진출을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인도경제는 현재의 취약한 거시경제 여건, 정부 예산상의 제약 등으로 단기간에 고성장 달성은 어려울 것이나, 정부의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 및 인프라 중심의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세가 회복될 전망이다.
  - 우리는 인도정부가 산업회랑을 따라 전국에 추진 중인 교통망과 산업단지, 스마트시티, SEZ 등 인프라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투자 지역을 동부와 서부로까지 확대하고, 인프라 투자기금 설립에도 참여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번에 투자 규제가 완화된 방산·보험·전자상거래·도시개발 분야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함.

## 1. 예산안 주요 내용

- 2014년 7월 10일 인도 신정부는 재정적자 규모를 GDP대비 4.1%로 설정하고, 2015년 3.6%, 2016년 3.0%로 점진적으로 감축하면서도 7~8%대 고성장 궤도 재진입을 목표로 한 2014/15년<sup>1)</sup> 예산안을 발표하였음.
- 인도정부가 매년 회계연도 시작에 앞서 발표하는 예산안은 인도 거시경제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향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과 인도정부가 추진할 분야별 주요 정책을 포함하고 있어 경제정책 로드맵의 역할을 함.
- 2014년처럼 총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해에는 2월 말 임시예산안이 발표되고 신정부 구성 후 새 예산안이 발표됨.

### 가. 재정건전성 강화

- 신정부는 재정적자 규모를 2016년까지 GDP 대비 4.1% → 3.6% → 3.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정부 예산의 총수입 증가율을 2013년(12.8%)보다 소폭 높은 12.9%로 책정하였음.
- 주로 간접세 수입의 상향조정(2013년도 9.5% 증가 → 20.1% 증가)을 통해 조세수입을 16.9% 증대
  - 간접세 증가율은 물품세 15.6%, 서비스세 31.1%, 관세 14.9%로 각각 전년대비 13.9%, 6.9%, 8.9%포인트씩 높아졌음(상세 내용은 '[부록] 조세제도 개편 주요 내용' 참고).
- 조세 외에 민영화를 통한 자본수입도 2013년보다 약 3배 확대
  - 인도정부는 2014년도 공기업 지분매각 규모를 4,340억 루피(약 72억 달러)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영은행도 경영권이 보장되는 한에서 지분 매각을 허용할 예정

표 1. 공기업 지분매각 추이 및 계획

(단위: 십억 루피)

구분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계획)
지분매각 금액	241	228	155	258	160	434

주: 환율은 달러당 60.02루피 또는 루피당 0.02달러(2014. 7. 17 기준).  
자료: India Budget 2014/15.

- 대신 신정부는 총지출 증가율(12.5%)을 전년도(28.2%)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대폭 낮췄음.
- '최소정부, 최대행정' 원칙의 효과적 실천을 위하여 지출관리위원회(Expenditure Management Commission)를 설립하고 정부지출 최소화와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적극 도모

1) 2014년 4월~2015년 3월 회계연도를 의미함. 이하에서는 2014년도로 표시.

- 상기 위원회는 금번 회계연도 내 정부예산 지출의 개혁, 특히 연료, 식량 보조금 지출을 조정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계획
- 또한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외 지출(2013년도 11.8% → 9.4%)은 하향조정된 반면 개발사업에 관련된 계획 지출은 확대하였음(2013년도 15.0% → 21.0%).
- 각종 보조금, 이자, 연금, 일반 서비스, 사회 서비스, 국방비, 주정부 지원금, 공무원 월급 등 고정지출은 최소화하고, 인프라 및 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출을 대폭 확대

표 2. 2014년도 예산안 개요

구 분 <sup>1)</sup>	2014년도 예산액 (십억 루피) <sup>5)</sup>	2014년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가율 <sup>6)</sup>	2013년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가율 <sup>6)</sup>
<b>총수입(Total Receipts)</b>	17,948	12.9%	12.8%
- 소득수입(Revenue Receipts)	11,897	15.6%	17.1%
• 순조세수입	9,772	16.9%	12.7%
직접세	7,362	15.7%	13.9%
간접세	6,279	20.1%	9.5%
• 조세 외 수입	2,125	10.0%	40.7%
- 자본수입	6,051	7.8%	5.6%
• 대출금 회수	105	-2.8%	-28.0%
• 기타 수입	634	145.7%	0.0%
• 기타 부채	5,312	1.3%	7.0%
<b>총지출(Total expenditure)</b>	17,948	12.5%	28.2%
- 계획 외 지출(Non plan expenditure)	12,198	9.4%	11.8%
- 계획 지출(Plan expenditure)	5,750	21.0%	15.0%
농업	175	-34.3%	2.9%
농촌개발 <sup>2)</sup>	30	-94.1%	14.0%
관개 및 홍수관리 사업	17	325.0%	0.0%
에너지	1,662	-7.0%	35.3%
산업 및 광물	402	11.4%	8.7%
교통 <sup>3)</sup>	1,162	6.6%	20.4%
통신	130	39.8%	50.0%
과학기술 및 환경	187	38.5%	12.5%
일반경제 서비스	263	-1.9%	32.7%
사회 서비스 <sup>4)</sup>	794	-51.7%	20.5%
일반 서비스	79	8.2%	28.1%
<b>재정적자(총지출-소득수입-대출금회수-기타 수입)</b>	1,041	1.3%	7.0%

주: 1) 총지출 규모는 계획 지출과 계획 외 지출을 합한 금액임. 계획 지출은 계획 외 지출에 포함되는 각종 보조금, 이자, 연금, 일반 서비스, 사회 서비스, 국방비, 주정부 지원금, 공무원 월급 등 고정지출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임.

2) 농촌지역 주택건설 포함, 도로건설 미포함.

3) 농촌지역 도로건설 포함.

4) 농촌지역 주택건설 미포함.

5) 환율은 달러당 60.02루피 또는 루피당 0.02달러(2014. 7. 17 기준).

6) 예산액 증가율은 전년도 수정 예산안 대비 증가율임.

자료: India Budget 2014/15.

## 나. 인프라 개발 확대

■ 신정부 예산안은 모디노믹스<sup>2)</sup>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산업회랑과 교통망 등 주요 인프라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개발자금 확보방안도 포함

- 신설 국가산업회랑단(National Industrial Corridor Authority) 주도하에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산업회랑을 개발하고, 동 산업회랑을 중심으로 교통망과 산업단지, 스마트시티를 비롯한 인프라를 구축
- 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이 결성한 지자체채무보증기금(Pooled Municipal Debt Obligations Facility)<sup>3)</sup>에 대한 지원 규모를 2013년보다 10배 늘리고, 서민층 및 청년층의 주택구매 활성화를 위한 국민주택은행 지원 자금도 5,000억 루피(약 83억 달러) 배정
- 농업부문의 경쟁력 및 수익성 향상 위해 다양한 농촌 금융지원 펀드를 조성하여 농촌 인프라 확충을 도모
- 시중은행의 인프라 개발자금 공급 확대를 촉진하는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
  - 시중은행들의 장기 인프라 채권 발행을 장려하기 위해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할 시 은행들이 충족해야 하는 SLR/CRR 의무조건을 철폐<sup>4)</sup>
  - 부동산투자기금(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을 장려하고, '인프라투자기금(Infrastructure Investment Trust)'도 배당이익에 대한 세금(dividend distribution taxes)을 철폐하는 등 REITs와 유사한 혜택을 주어 인프라 개발 활성화를 도모

■ 전력부문에서는 석탄 공급 확대, 송배전 시스템 개선,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24시간 전기 공급에 성공한 구자라트식 성공 모델의 전국적 확대를 도모

- 2015년까지 생산 공장에 필요한 석탄 공급 100% 달성을 목표로 석탄 생산 증대 및 선탄장(coal washeries) 추가 설립을 추진하고 송배전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를 위해 라자스탄과 구자라트 등의 태양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

2) 모디노믹스에 대해서는 최윤정(2014), 「인도 총선 결과와 향후 경제정책 방향」, KIEP 지역경제 포커스 제14-26호 참고

3) 지자체채무보증기금은 지난 2006년 상수도, 교통, 환경, 보건 및 교육 관련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15개의 인도 시중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펀드를 조성하여 설립한 것임. 특히 본 기금은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 기반 도시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지방 도시개발 관련 기관과 특별목적회사(Special Project Vehicle)에 지원됨. 동 기금은 도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신용도와 수익성을 개선하고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4) 현재 인도 시중은행은 4%의 CRR(Cash Reserve Ratio)과 22.5%의 SLR(Statutory liquidity ratio) 의무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CRR은 지역농촌은행을 제외한 인도의 모든 시중은행이 예금 중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현금 비율(즉 지급준비율)을 의미하고, SLR은 시중은행이 정부 및 공기업 채권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함.

표 3. 인프라 개발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산업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첸나이-벵갈루루 산업회랑 지역에 3개의 신규 스마트시티 건설 추진(마스터플래닝 완성)</li> <li>- 뭄바이-벵갈루루 경제회랑 추진, 첸나이-비자그회랑 계획 추진(20개 신규산업 클러스터 포함)</li> <li>- 산업회랑 인근 스마트시티 100개 개발(710억 루피 배정) 및 교통망 확충을 통해 제조업 활성화 및 도시화 유도</li> <li>- 투티코린을 비롯한 16개 항만개발 프로젝트(1단계 사업)에 약 1,100억 루피 배정</li> <li>- 전국 및 주 단위 고속도로 건설에 3,790억 루피 배정(연내 8,500km 완공 목표)</li> <li>- 동북부지역 철도 건설에 100억 루피 배정</li> <li>- 갠지스강 화물운송용 수로 건설에 420억 루피 및 수질 개선에 204억 루피 배정</li> <li>- 은행들의 CRR, SLR 등의 규제완화를 통해 인프라 부문 대출 확대 유도</li> <li>- 인프라 부문에 대한 은행들의 장기 펀드 대출 확대</li> </ul>
도시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채무보증기관(Pooled Municipal Debt obligation Facility)에 5,000억 루피 배정</li> <li>- 지하철 프로젝트(Lucknow, Ahemdabad)에 10억 루피 배정</li> </ul>
주택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층의 주택구매 유도를 위해 주택대출 추가 확대 계획</li> <li>- 저금리의 주택대출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은행에 400억 루피 지원</li> <li>- 농촌 주택공급을 위해 별도로 800억 루피 지원</li> </ul>
농촌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인프라개발펀드에 2,500억 루피 배정(전년대비 500억 루피 인상)</li> <li>- 보관창고인프라펀드에 500억 루피 배정</li> <li>- 단기 협력농촌금융 지원에 약 5,000억 루피 배정</li> <li>- 장기 농촌금융펀드 지원에 약 500억 루피 배정</li> </ul>
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탄 생산 확대를 위해 'Ultra-Modern Super Critical Coal Based Thermal Power Technology'에 10억 루피 배정</li> <li>- 송배전 시스템 개선에 50억 루피 배정</li> <li>- 태양력발전소 프로젝트에 50억 루피 배정(라자스탄, 구자라트, 타밀나두, 안드라프라데시 등)</li> </ul>

주: 환율은 달러당 60.02루피 또는 루피당 0.02달러(2014. 7. 17 기준).  
자료: India Budget 2014/15.

## 다. 기업환경 개선

■ 이번 신정부 예산안에는 모디노믹스의 핵심인 민간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친기업적 정책이 포함됨. 먼저 방위산업, 보험업, 전자상거래, 도시개발 부문의 외국인투자 규제가 대폭 완화됨.

- 방위산업과 보험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가 기존 26%에서 49%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보험 개방은 문순 기간(8월) 정기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음.
-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를 통한 B2C 소매업이 개방되고, 스마트시티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부지 규모 및 금액 요건이 완화됨.

표 4. 외국인투자 규제완화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F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위산업 및 보험산업 부문 투자 상한을 26%에서 49%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다만 상공부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를 통한 승인과정은 유효</li> </ul> </li> <li>- 전자상거래(E-Commerce) 플랫폼으로 B2C 소매업시장 판매 허용(자동승인)</li> <li>- 도시개발 관련 투자규모 규제를 완화(부지규모 50만m<sup>2</sup>에서 20만m<sup>2</sup>로 완화, 투자금 규모는 기존 1,0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완화)</li> </ul>

자료: India Budget 2014/15.

■ 투자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경제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 부지 개발 및 수출 여건을 개선함.

- SEZ 부지로 할당된 약 4만 7,000헥타르 중 실제 개발된 곳은 1만 7,000헥타르(36%)에 불과함에 따라, 금번 예산안은 SEZ 예정 부지의 효율적 개발과 활용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마련할 계획
  - o 인도정부는 지난 2000년 SEZ 제도를 도입하여 양호한 인프라, 세금 혜택을 비롯한 각종 행정적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민간투자 유치에 확대하려고 했으나, 부지 개발과 조세문제 해결이 지연되면서 운영 실적이 저조하였음.
- 또한 인도 주요 항구인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항과 칸들라(Kandla)항 인접 지역에 신규 SEZ를 개발하여 수출 확대를 도모

■ 그동안 투자의 걸림돌이 되었던 복잡한 조세제도를 단순화하는 등 조세행정 개선방안도 발표함.

- 중앙정부와 주정부 세금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현재의 조세제도를 개혁하여 통일된 상품 서비스세를 부과하는 GST(Goods and Services Tax)의 도입으로 조세행정 간소화 및 정부의 세수확대 도모
- 조세관련 법규도 개정하여 과거 소급적용 추진 등으로 잃어버린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
  - o 납세자들의 조세관련 소송을 줄이기 위해 조세부과 시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률 및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추진하는 전담위원회 설립도 추진

## 라. 금융선진화

■ 금융시장의 건전성 달성과 함께 규제완화 및 민간참여 유도로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

- 2018년까지 바젤Ⅲ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도 국영은행의 주식 보유 규모를 24조 루피(약 400억 달러)로 확대해야 하므로, 정부 경영권 확보 후 남은 지분은 단계적으로 시장에 매도함으로써 은행 재원을 확보
- 무수익자산 축소 등 건전성 의무를 이행하는 은행에 보다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

제거로 회사채, 파생상품을 비롯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

- 중앙은행은 소기업, 농민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은행 개발을 독려하여 궁극적으로 인도 전 가구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 관리·감독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 금융 전반의 법과 제도를 총괄하는 Indian Financial Code 도입을 가속화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회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금융부문 선진화와 국제화를 추진
  - Indian Financial Code는 인도 금융부문의 50개 법을 대체할 상위 법으로 2013년 인도 재무부 산하에 설립된 금융개혁입법위원회(Financial Sector Legislative Reforms Commission) 주도로 도입을 추진 중임.

표 5. 금융부문 대책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은행 건전성 강화	- 2018년까지 국영은행 지분의 단계적 매각으로 2.4조 루피 추가 확보 - 국영은행 무수익자산(Non Performing Assets) 문제 해결을 위해 6개 부실채권회수법원 신설
금융 서비스 확대	- 중앙은행 감독하에 소기업, 저소득 가구, 농민, 이민자들까지 대상으로 지역은행, 지분은행 등 차별화된 다양한 은행을 개발하여 전 가구에 금융 서비스 제공
국제기준 금융제도 도입	- 조세, 통화정책, 주식시장 등 금융 전반의 법·제도 개선 및 국제화 추진 (Indian Financial Code라는 통화정책 총괄 프레임워크 개발)

자료: India Budget 2014/15.

## 2. 평가 및 전망

■ 이번 예산안은 재정적자 규모 축소에 대한 신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음.

- 2년 연속 4%대로 경제성장이 둔화된 데다가 신정부 출범 이전인 4~5월 두 달간 재정적자가 이미 임시예산의 목표치 46%에 도달함에 따라 예산안 재정적자 목표치의 상향조정이 예상되었지만, 신정부는 지난 임시예산안에서 설정한 GDP 대비 4.1%의 재정적자 목표를 고수하였음.

■ 하지만 당분간은 경제성장 둔화로 세수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2014년도 재정적자 목표(GDP 대비 4.1%)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지출 관리가 필요

- 예산안은 조세수입의 상당 부분을 간접세수 증가에 기대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의 간접세수 증가율이 14%에도

미치지 못한 데 비추어볼 때 현재의 거시경제 여건하에서 20% 이상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sup>5)</sup>

- 민영화 및 정부자산 매각에 따른 자산수익으로 일정 부분을 보존한다고 해도 재정적자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임.
  - o 2013년도 실제 정부자산의 매각 규모는 약 1,600억 루피로, 당초 계획했던 4,000억 루피의 40% 수준에 불과하였음.
- 이에 따라 신정부는 예산지출을 지속 축소하는 한편 민관협력사업과 같은 형태로 민간자본의 참여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정부지출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더욱 필요함.

■ 경제성장 측면에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정 및 금융 정책의 한계로 단기 성장을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나, 인프라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기업환경의 개선이 가시화되면서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이 점차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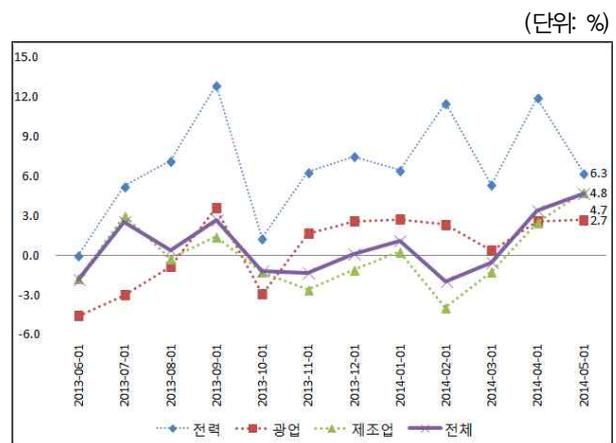
- 인프라, 전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2014년도 경제성장률은 5%대로 상승할 전망이다.
  - o 정부 주도로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추진되는 동시에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신탁, 금융부문 개선 등을 통해 조성된 민간 자금이 산업생산에 투입된다면 지난 2년간 정체되었던 투자증가율(2012년 1%, 2013년 -1%)이 회복되면서 제조업(2013년도 -0.7%)을 중심으로 경제성장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그림 1. 최근 인도 GDP 및 투자 증가율 추이



자료: CEIC(2014. 7. 14 접속).

그림 2. 최근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CEIC(2014. 7. 14 접속).

5) Standard Chartered(2014), "India: This is just the beginning." (July 10)

### 3. 시사점

■ 향후 인도정부 주도로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전개될 전망임에 따라 우리나라는 인도 인프라 부문에 대한 포괄적 진출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임.

- 산업회랑과 주요 고속도로를 따라 전국에 산업단지 및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인프라 산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현재 델리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북부)와 첸나이(남부)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투자 지역을 동부와 서부로까지 확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음.
- 이미 인도의 4위 해외투자국인 일본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자금을 앞세워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건설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주도하는 가운데 2014 1월 일-인 정상회담에서 지하철 및 고속철도 추가 투자계약을 체결했음.
- 인도의 1위 교역대상국인 중국도 인도정부에 2017년까지 3,000억 달러 수준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협의 중임.

■ 인프라 투자기금의 설립에 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 제고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임.

- 금융지원은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이 정부에 가장 많이 요청하는 분야이며, 이와 관련해 2012년 양국 수출입은행은 인프라 개발사업 참여 기업에 대하여 5년간 10억 달러를 공동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인도에 ODA를 공여하지 못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인도정부와 기금조성 협의를 개최하거나 기금 설립에 참여한 여타 국가들과의 공동 진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함께 개선된 투자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함.

- 특히 금번 예산안에서 투자규제가 완화된 방산·보험·전자상거래·도시개발 분야 등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의 진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임.
  - 세계 1위 무기 수입국인 인도는 이번 예산안에서 국방 부문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약 380억 달러, 전년대비 12.4% 증가)하기로 계획했는데, 향후 군 현대화를 중심으로 한 인도 방위산업에서의 투자 기회를 활용해야 할 것임.
  - 손해보험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에도 연평균 20%가 넘는 빠른 성장을 거듭하는 등 유망산업으로 부상하였음.
  - 인도의 멀티브랜드 소매유통업 부문의 개방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전자상거래를 활용하여 인도 유통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하는 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음.

- 인도정부가 SEZ 개발사업에 다시 박차를 가함에 따라 현재 라자스탄에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전용 SEZ를 조속히 완공하는 한편 신규 SEZ 개발 및 운영 사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KIEP

**[부록] 조세제도 개편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세수 변화*
직접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소득세 면세 범위를 기존 20만 루피에서 25만 루피 이하로 확대(60세 이하)</li> <li>- 전력 생산, 송배전 투자에 제공하는 10년 면세혜택을 2017년 3월까지 연장</li> <li>- 뮤추얼펀드의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을 기존의 10%에서 20%로 인상</li> <li>- 모든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해 원천세 5% 적용(과거 인프라펀드채권에만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 14.8% 증가 (10.9% 증가)</li> <li>■ 소득세 17.8% 증가 (19.9% 증가)</li> </ul>
간접세	<p>관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투자확대를 위해 일부 화학제품, 석유제품에 대한 기본관세 인하</li> <li>- 국내 전자산업 육성을 위해 일부 수입되는 전자제품에 대해 기본관세를 적용</li> <li>- LDC, LED TV 생산 확대를 위해 LCD, LED TV패널에 대한 관세를 철폐</li> <li>- 철강제품(스테인리스)에 대한 관세를 5%에서 7.5%로 인상</li> <li>- 풍력발전기 생산과 관련한 부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5%로 인하 및 풍력발전기 부속품에 대한 특별부가세(Special Additional Duty) 전면 철폐</li> <li>- 태양열 프로젝트 관련 기계 및 기기류 수입관세는 5%로 축소</li> <li>- 보석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보석(가공이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li> <li>- 반가공 상태의 보석류 및 세공된 다이아몬드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li> <li>- 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섬유제품에 적용되는 면세범위를 수출가액의 3%에서 5% 수준으로 확대</li> <li>- 보크사이트 수출세 기존 10%에서 20%로 인상</li> <li>- 석탄은 기존 2.0%에서 2.5%로 인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세 15.6% 증가 (1.7%증가)</li> <li>■ 서비스세 31.1% 증가 (24.2%증가)</li> <li>■ 관세 14.9% 증가 (6%증가)</li> </ul>
	<p>물품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가공 및 포장기계에 대한 물품세를 10%에서 6%로 인하</li> <li>- 500~1,000루피인 신발류에 대한 물품세를 12%에서 6%로 인하</li> <li>-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제품(태양열 강화유리 및 태양열 프로젝트 관련 설비 등)에 대한 물품세 철폐</li> <li>- 담배에 대한 특별물품세를 기존 11%에서 72%로 확대</li> <li>- 다이아몬드에 대한 물품세 2.5% 부과</li> <li>- 탄산수에 대한 물품세 5% 부과</li> </ul>	
	<p>서비스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광고에 대한 서비스세 적용 범위 확대(온라인, 모바일 분야)</li> <li>- 냉방화물 서비스 및 신개발 약품의 임상실험에 대해 서비스세 적용</li> <li>- 면제품의 적재, 하역, 수송, 보관에 대한 서비스세 철폐</li> </ul>	

주: \* 2013 대비 세수(Tax Collection) 증가율임. 괄호 안은 2012년 대비 2013년 세수 변화율임.  
자료: India Budget 2014/15.